

## 한-칠레 FTA, 과연 국익인가

이영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간사



농사일손도 부족한 우리 농민들이 경찰 집계 114일의 상경투쟁을 벌이면서까지 '한-칠레 FTA'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취약한 한국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공산품 수출에도 큰 이익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협정이기 때문이다.

칠레는 세계가 인정하는 농업강국이다. 칠레의

상품 수출액은 우리나라의 10%(182억 달러) 수준이나, 농산물 수출은 28억 달러(2000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2배가 넘으며,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15억 달러는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14억 달러)일 정도로 농업 강국이다. 특히 과수분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으며, 엄청난 과일 생산 증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협정으로 국내과수 농가에만 피해가 있

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sup> 또한 전체 재배면적 중 23%, 전체 농가 중 20%를 차지하는 과수농업이 붕괴했을 때, 그나마 돈 되는 몇몇 품목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과일생산, 가격폭락의 악순환을 유발시켜 결국엔 도미노 현상처럼 한국농업 전반의 피해로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과수농가의 특성상 전업농(과수) 비중이 64.9%에 달해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소득감소는 결국 영농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를 상쇄시킬 만큼 공산품 수출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무역수출액의 불과 5%(2002년 기준)를 차지하면서도 3억 불(수출 4억 5천 불, 수입 7억 5천 불)의 무역적자를 본 칠레 시장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장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인구 1,500만(남한인구의 1/3)의 칠레 시장에서 매년 3억 불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가 FTA 체결로 인해 얻는 것이라곤 6%의 관세 면제이다. 6%의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공산품의 수출보다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6%의 관세면제 효과는 우리 환율이 72원 오르는 가격 효과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칠레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미 주요국에도 모두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FTA 체결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이들 나라의 환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칠레도 환율을 97년에 비해 70%(우리나라 30%)나 올려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환율로는 남미 국가들과 경

쟁이 되지 않는다. 결국 6%의 관세면제효과는 급격히 변하는 환율정책으로 인해 그 효과를 낙관할 수조차 없다. 더욱이 칠레는 APEC 보고르 선언<sup>2)</sup>에 따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관세 철폐 계획을 밝혔으며 실제로 매년 1%의 관세 감축을 시행하고 있어 6% 관세면제 효과는 지속될 수 없다.

한-칠레 FTA를 찬성하는 이들은 그 이유를 FTA 기준 지연으로 자동차 시장점유율 하락 등 대칠레 무역적자의 확대를 들고 있다.

실제로 2002년 3억 불이던 무역적자가 2003년 10월까지 4억 4천 불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수출부진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조차 2003년 대 칠레 수출이 증가하여 FTA 비준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는 것처럼 실제 수출은 오히려 9.6%(2002년 대비)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입이 32.2%나 증가하여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FTA 비준 지연으로 무역적자가 커졌다고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실제 일본은 칠레와 FTA를 맺지 않았지만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도 현대차의 수출이 급증한 것을 볼 때 수출활성화의 동력은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품질과 유통 등 수출전략이 더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국회와 학계에서조차 한-칠레 FTA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칠레 FTA의 실효성을 논하기보다는 대외신인도가 중요하기에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조차도 칠레와의 FTA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대외적인 신인도 때문에 국가적 손실

1) 98년 12월 미국 산 오렌지의 대량수입으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가량으로 하락

2) 'Chile will eliminate tariffs on most imports by 2010', Chile's Individual Action Plan-sixth version



이 초래될 협정을 비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세계질서의 관리자임을 자임하는 미국조차도 2000년 12월까지 국가간 맺은 무역협정 45개 중 체결한 날로부터 비준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준 통과가 된 사례도 있으며, 더욱이 양국 간 아직까지 비준이 안 된 협정이 15개이고 그 중에서 미국 의회가 비준을 앓고 있는 협정이 8개나 된다.

정부 주장대로 정녕 한-칠레 FTA 비준이 불가피하다면 백 번, 천 번을 양보해서 한-칠레 FTA 논의를 WTO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정부는 FTA는 양자간 협정이고 DDA는 다자간 협정이기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요국들이 FTA를 맺으면서 예민한 품목에 대해서는 DDA 협상 이후로 논의하기로 한 예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내용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칠레와의 FTA를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국가적 실익도 없는 한-칠레 FTA를 단순히 대외신뢰도 때문에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준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군대가 없어도 나라는 유지되지만 식량이 없는 국가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식량주권만큼은 지켜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준강행은 명분이 없다.

둘째, 한-칠레 FTA가 국회비준을 받게 되면 곧바로 발효되기에, 이후 WTO DDA / 쌀 재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지

기 때문이다. 칠레와의 FTA에서 1,000여 품목이 넘는 농산물에 관세철폐 약속을 한만큼 한국이 주장하는 개도국 지위유지, 관세·보조금 감축 최소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어 결국 WTO, 쌀 재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셋째, 이후 DDA 결과는 개방에 있어서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이 되기에 한-칠레 FTA도 국제적 개방수준에 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제 농업통상 협정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농업의 피해 폭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개방이 대세라도 FTA를 몇 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맺더라도 얼마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쿠즈네츠 교수의 말을 정부 당국자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